

# “10조 증안펀드 가동… 내수회복 위해 연말행사 등 진행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시장상황 예의주시, 상황별 대응  
40조 규모 채안펀드 가동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 기금 펀드'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민간이 평소대로 움직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5일 평정심을 잃지 말고 내수 회복에 전념하자는 지론을 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시장안정 조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상황별 대응계획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대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 매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시스

프로그램 등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증안펀드란 주식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우려될 시 국책은행 등의 기금을 출연을 받아 유동성을 공급하는 특수목적의 펀드를 일컫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회의 참석자

들은 “시장 참가자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다만, 국내 상황이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과 맞물려 변동성을 키우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

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시장 정상화까지 경제·금융상황 점검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24시간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다.

회의 직후 정부는 최대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즉시 가동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권·자금시장에 총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한국은행에서는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개시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필요시 국고채와 외화 RP 매입으로 외화유동성 공급을 맡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상대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안도 발표했다. 계엄 선포·해제를 둘러싼 일련의 정치적 사태와는 별도로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소와 같이

뚜벅뚜벅 걸어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계획된 연말행사 등을 그대로 진행해 달라”며 “모두가 최대한 평소처럼 하는 것이 결국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에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대상을 확대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1000억 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환연장 제도의 경영여로 인정 요건은 다중채무 3개 이상에서 2개 이상으로, 매출은 전기 대비 ‘10% 감소’에서 ‘감소’로 완화한다.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대출 자금도 올해 중 2000억 원가량 추가로 공급한다. 지역신보 전환보증 규모를 2027년까지 총 8조 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1월부터 기보형 전환 보증도 2조 원 규모로 지원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韓 탄핵정국, 성장률 등 경제영향 제한적”

**이창용 한은 총재**  
“정치·경제적 프로세스 분리 될 듯  
1400원대 원·달러 환율 내릴 것”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두 번의 탄핵 정국을 맞이해왔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재임 시기)을 보면 금융시장에는 단기적 영향도 이번보다 적었고, 장기적 영향도 적었다. 성장률을 비롯한 한국 경제 상황에는 (탄핵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5일 서울 남대문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번 계엄령 선포·해제는 금융시장에 일시적 충격을 줬다. 지난 3일 1444원대까지 오른 원·달러 환율은 이날 기준 1412.4원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1400원대에 머물러 있다. 시장에서는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면 1400원대를 넘어 1500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날 이 총재는 “과거 (탄핵 정국) 경험을 봤을 때 정치적인 프로세스와 경



제적인 프로세스가 분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심리적인 영향은 클 수 있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성장률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1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도 서서히 내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계엄 사태가 당연히 부정적 뉴스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410원대로 약간 오른 상태”라며 “이후 새 쇼크(충격)가 없다면 천천히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일이 한국경제의 신인도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계엄사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외려 (비상계엄 선포 뒤) 6시간만에 프로세스가 운영돼 해제되고, 큰 충돌 없이 해결됐다는 면에서 민주주의 성숙도를 보이는 기회가 됐고, 이후 큰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전날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amp;포어스(S&P)는 비상계엄 사태가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S&P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 안정적, 단기 외화 원화등급은 A-1+로 평가하고 있다.

앤디 리우 S&P전무는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할 정도는 아니다”며 “오랫동안 한국의 정책 리스크가 안정성을 보였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선제적 금리인하 가능성에는 내부 위험보다 외부 위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계엄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있다 없어질 것”이라며 “앞으로의 경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새정부로 들어서면서 어떻게 (정책 등) 바뀔 지 수출 모멘텀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수출 부진… 3분기 GDP 성장률 0.1% 그쳐

한은, 2분기 연속 1% 미만 성장  
수출 0.2% 줄고 수입 1.6%p 늘어

수출이 꺾이면서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에 그쳤다. 2분기 연속 1% 미만 성장률이다. 내수(소비·투자)는 회복되고 있지만 성장률을 주로 이끄는 수출이 7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3분기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1%를 기록했다. 지난 10월 발표한 속보치(0.1%)와 동일한 수준이다.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가계·기업·정부가 일정기간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에 그친 이유는 수출이 부진해서다. 수출은 전분기 대비 0.2% 감소한 반면 수입은 1.6%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자동차와 배터리소재 등 비IT품목의 수출 감소로 부진한

실적을 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내수는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민간소비는 재화(전기·가스, 승용차, 통신기기 등)와 서비스(의료, 운송 등)가 모두 증가하면서 0.5%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설이 모두 줄면서 3.6% 감소하고,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장비 등을 중심으로 6.5% 증가했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돈에 쥐는 소득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567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4% 증가했다.

실질 국민총소득은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실질 구매력을 나타낸다.

국민이 외국에서 번 소득에서 외국인 이 국내에서 번 소득을 뺀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2분기 4조4000억원에서 3분기 9조2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나유리 기자

##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총수일가 지분율 소폭 상승

총수 지분율 24.7%, 일가 47.7%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외계열사 간접 출자가 늘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우려가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를 분석·공개했다.

분석대상은 올해 88개 공시대상기업 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43개 전환집단 중 9월 기준 총수가 있는 전환

집단 41곳이다.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총수일가 평균지분율은 각각 24.7%, 47.7%로 전년(23.2%, 46.6%)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일반 대기업집단 대표회사의 총수, 총수일가 보유 평균 지분율(22.4%, 40.2%)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전환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3.4단계로, 일반 대기업집단의 평균 출자단계인 4.4단계보다 적다. 이는 수직적 출자 외 국내 계열회사 출자 금지 등 지주회사 등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수평형·방

사형·순환형 출자 등이 제한·금지된 결과로, 전환집단이 비교적 단순·투명한 출자 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주회사 등의 해위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국외 계열사 또는 지주체제 외 계열사로 인해 출자 구조가 복잡해지는 사례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로 간접 출자한 사례는 전년(25건)보다 증가한 32건이다. 또 지주회사 체제밖에서 지배하는 368개 계열회사 중 228개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배터리 3사, 인조흑연 생산규모 확대 추진

>> 1면 ‘中, 對美 흑연…’서 계속

중국이 특정 미국 기업을 찍어 흑연 수출을 금지하면 해당 기업을 고객사로 둔 한국 기업은 이차전지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또한 흑연 조달이 불안해질 경우 음극재 확보 문제로 국내 기업들의 이차전지 생산 규모,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이차전지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만큼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배터리 3사와 소재 기업들은 미국, 호주, 아프리카 등

핵심 광물 공급처의 다변화에 힘쓰는 한편 인조흑연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급망 강화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인조흑연의 생산 규모를 연내 1만 8000톤까지 확대하고 2026년에는 5만 8000톤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천연흑연은 2026년 15만 4000톤, 2030년 18만 2000톤까지 생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프리카로 흑연 도입선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천연흑연 기반 음극재의 경우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중국의 발표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현재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